

“암환자 절반이상 5년 넘게 생존”

암 환자 생존율이 10년 전보다 1.3배 증가했지만, 암 확진 후 치료를 받고 있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수는 17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국민 100명 중 3명이 암을 경험한 만큼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암 생존율은 70.8%로 10년 전인 2001~2005년 생존율 54.0%보다 16.8%포인트 증가했다.

생존율은 일반인의 5년 생존율에 비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생존율을 측정하고 있다. 즉, 10년 전 일반인 10명이 5년간 생존했을 때 암 환자는 5명만 암 진단을 받고 생존했거나, 최근엔 7명이 치료를 받고 있거나 완치된 상태라는 뜻이다.

이 같은 5년 상대생존율은 미국 69.2%(2008~2014년), 캐나다 60%(2006~2008년), 일본 62.1%(2006~2008년)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10년 전 대비 생존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암종은 위암 18.0%포인트(75.8%), 간암 13.9%포인트(34.3%), 전립선암 13.5%포인트(93.9%), 폐암 11.1%포인트(27.6%) 등이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의 2012~2016년 생존율도 미국 등보다 높았다. 미국과 비교하면 위암은 75.8%(한국)과 32.1%, 대장암은 76.0%와 66.2%, 간암은 34.3%와 18.8%, 유방암은 92.7%와 91.1%, 자궁경부암은 79.8%와 68.9% 등으로 높았다.

이처럼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 확진 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유병자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3만9951명(남 76만4103명, 여 97만5848명)이었다. 2016년 우리나라 국민(5111만2380명) 29명당 1명이 암유병자라는 얘기다.

65세 이상에서는 전체 인구(67만1161명)의 11.0%인 74만7898명이 암유병자였다. 9명당 1명이 암 치료를 경험한 셈인데 성별로 남자는 7명당 1명, 여자는 12명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암종별로는 남녀 모두 갑상선암(37만9946명) 유병자가 전체의 21.8%로 가장 많았으며 위암(27만3701명), 대장암(23만6431명), 유방암(19만8006명), 전립선암(7만7635명), 폐암(7만1654명) 순이었다.

암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 환자는 91만6880명으로 전체 암유병

국민 29명당 1명 암 확진후 치료받거나 완치 복지부 “권역별 생존자통합지센터 확대”

자의 52.7%였다. 암유병자 절반 이상이 5년을 넘겨 초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추적 관찰이 필요한 2~5년 암 환자는 45만8701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26.4%, 적극적인 암 치료가 필요한 2년 이하 암 환자는 36만4370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20.9%였다.

정부는 그간 1차(1996~2005년)와 2차(2006~2015년) '암정복계획'을 수립·추진해 국가 암관리체계를 구축했다.

2016년 9월에는 암예방, 조기검

진, 암생존자 지원, 완화의료, 연구 등 암 관련 전 분야에 걸친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암유병자 174만명 시대를 맞아 초기 암치료를 완료한 암 환자와 가족의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 등 암생존자 통합지지지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암생존자통합지센터를 지정하고 권역별 암생존자 통합지지지센터를 올해 7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한다. 소아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암생존자 통합지지지 시범사업기관도 2곳을 처음 선정해 운영한다.

아울러 권역 호스피스센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늘리고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암생존율 증가는 늘어나는 암생존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다”고 말했다. “2019년에는 특히 그간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암생존자 통합지지지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국가암관리사업의 확대·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새해에도 도박은 안돼요” 27일 오전 도박의 빛을 희망의 빛으로 ‘회복의로의 길’ 행사가 열린 서울 종로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황현탁 원장이 새해 맞이 도박예방 메시지 전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 일곡동 주민들 “쓰레기 불법매립 경위 밝혀야”

광주 북구 일곡동 주민들이 27일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건설 과정에서 쓰레기 불법매립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행정당국에 정확한 실태 파악과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곡동 주민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청소년문화의집 건설 중단과 쓰레기 불법매립 문제에 대한 주민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주민 50여명과 시 직원 순환과장 등 공무원 5명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시 관계자는 청소년문화의집 건설 중단의 배경이 된 쓰레기 불법매립 실태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회의에서 '일곡 2·3근린공원 등 2곳에 14만 분량의 쓰레기가 24년 동안 불법으

로 매립돼 있었다. 불법매립 쓰레기 처리 등 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량·면적, 불법매립 주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쓰레기 관리 현황 등을 시 관계자에게 질문했다.

또 쓰레기 처리와 청소년문화의집 대체부지 선정 등 시의 후속대책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쓰레기 불법매립 현황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 규명·쓰레기 처리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민들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해결방안을 수립하는 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주민자치회 등

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쓰레기 불법매립·청소년문화의집 건설중단에 대한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주민은 “주민 대다수는 광주시가 불법매립에 대한 조사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확한 해법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일곡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공사 도중 지하 7~10m 지점에서 불법매립된 생활쓰레기층이 광범위하게 발견되자, 최근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시는 지난 1994년 11월부터 3개월 간 삼각산 인근 쓰레기매립장의 생활쓰레기 14만여 일곡지구 내 근린공원 2곳에 분산 매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지인 숨지게 한 뒤 시신 유기 50대 검거

해남경찰서는 27일 지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땅에 매장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지인인 B(58)씨를 숨지게 한 뒤 해남의 한 간척지 주변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께 해남군 신이면 간척지 인근 골포장 건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B씨는 목에 노끈이 묶인 채 1m 깊이 땅 속에 묻혀 있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타살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주변 CCTV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를 벌여 B씨의 지인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에 광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시신 부패 상태를 토대로 B씨가 지난 9월 살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시점과 장소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주 마시고 배짱’ 상습 무전취식 40대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A(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2시30분까지 광주 북구 한 술집에서 4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민취한 A씨는 술집에서 폭언을 반복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 발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과거 수십여 차례 무전취식을 해온 A씨가 출소 두 달만에 재범한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가족에 흥기 휘두른 20대 검거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가족을 향해 흥기를 휘두른 A(24)씨를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한 주택에서 외할머니(76)와 어머니(50), 여동생(20)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목 등을 크게 다치고, 여동생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던지고 소란을 피운 자신을 외할머니가 야단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신 질환 문제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경위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돌며 무면허 운전자 상대 자해공갈단 검거

전국을 돌며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자해사고를 낸 뒤 1억원을 넘게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면허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자해사고를 낸 뒤 무면허 약점을 잡아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통공갈)로 A(3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B(57)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구미와 포항, 원주, 청주 등 전국을 돌며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자해 사고를 낸 뒤 14명으로부터 총 1억1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교도소 동기 및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을 받으러 온 운전자들의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유발 후 상대방의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해 1인당 300만원에서 1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물색(미행)조, 환자, 해결사 등 역할을 분담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현장담사, 예행연습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